

부딪히고 넘어지고...차 대신 사람 잡는 ‘볼라드’

훼손·탈락된 채 방치...쓰레기 뒤덮여 흉물로 전락 2만1849개 정비인력 10여명 뿐...“수시 관리 한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한 동행을 돕기 위해 설치한 볼라드(Bollard)가 훼손된 채 방치되면서 오히려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다.

특히 광주권역에만 2만개가 넘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정비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해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권역에 설치된 볼라드는 모두 2만1849개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1541개, 서구 4149개, 남구 1132개, 북구 3977개, 광산구 1만1050개다.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에 따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설치 간격은 1.5m 안팎으로 설치하고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곳곳에서는 본래 기능을 잃은 볼라드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구 운전사거리 인근에서는 볼라드가 통째로 뺏힌 채 쓰레기 더미와 함께 길가에 방치돼 있었다. 주변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볼라드를 뒤덮으면서 도시미관도 크게 훼손된 모습이었다.

북구 중흥동의 한 인도에서는 볼라드 일부가 기울어져 있거나 외부 우레탄 마감재가 뜯겨 내부 쇠파이프가 그대로 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운전사거리 인근 상가 앞에 버려진 채 방치된 볼라드.

출돼 있었다. 녹이 슨 쇠파이프가 드러난 것은 물론, 내부가 비어 있는 볼라드에는 담배꽂조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이 버려져 있기도 했다.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시설물이 관리 소홀로 인해 오히려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시설로 전락한 셈이다.

김모씨 (40)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볼

라드를 보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훼손된 시설은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훼손된 볼라드를 방치하는 것은 아니다. 도로관리원들이 자체 순찰을 벌이는 한편 국민신문고와 유선 민원 등을 통해 파손 사실을 확인하면 정비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인력과 비용이다.

볼라드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정비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한 데다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2만개가 넘는 시설물을 일일이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고무 마감재나 지시대 등이 훼손돼 수리할 경우 7만5000~13만원가량이 들고, 전체가 파손돼 새로 설치하면 20만~3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5개 자치구가 최근 3년간 (2023~2025

년) 볼라드 수리에 투입한 예산만 8억2251만원에 달한다. 광산구가 4억26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 1억6099만원, 서구 1억3614만원, 동구 5693만원, 남구 4160만원 순이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면서 행정안전부도 정비에 나섰다.

행안부는 8월 한 달간 지자체와 함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부적합 볼라드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볼라드가 이탈해 차량 진입 억제 기능을 잃었거나 내부 철재가 노출되고 기울어지는 등 훼손된 시설도 정비 대상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볼라드뿐 아니라 다양한 도로·교통시설 관련 민원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민원이 접수된 곳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부적합 볼라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5:50	달달	04:50
☀️	예보	19:25	달달	19:13



광주	☀️	21~33
목포	☀️	21~31
여수	☀️	22~32
순천	☀️	21~33
구례	☀️	18~32
광주	☀️	21~32
진남	☀️	22~32
진남	☀️	23~29
진남	☀️	21~32
진남	☀️	21~30

목포	밀물 (고)	01:48 / 13:45
목포	썰물 (저)	07:11 / 19:10
여수	밀물 (고)	08:42 / 21:18
여수	썰물 (저)	12:42 / 14:43

12·29 여객기 참사 특수단, 국토부 3차 압색 공항공사·부산항공청도...업무상 과실치사상 자료 확보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74명을 입건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제 2차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11일 한국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단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한 국토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3월 참사 당시 국토부 항행위성정책과와 공항운영과 소속 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6월에도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국토부를 제2차 압수수색했다.

부산지방항공청에 대해서도 무안공항 건설·운영 과정에서 참사 원인이 된 요소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월 압수수색이 이뤄진 바 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기존 수사에서 세로로 확보된 의심 사항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74명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랑의 닭죽 나눔’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대인동 동량남랑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폭발초 1인가구를 위한 사랑의 닭죽 나눔’ 행사에서 광주서동구새마을회(회장 김대영)와 부녀회(회장 박미숙)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닭죽과 수박 등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응급의료 방해하면 최대 징역 5년...처벌 강화

대법원 양형위, 구조구급 등 방해범죄 기준 마련

응급의료와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구급대원 폭행 등 응급 현장에서의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

고하는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양형위는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을 대상으로 구조·이송·진료 등을 방해한 범죄의 기본 권고 형량을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정했다.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가중 영역은 징역 1~4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많은 경우 상한을 절반까지 높이는 특별조정을 통해 최대 법정 최고형인 징역 5

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6개월~2년, 가중 1년6개월~4년을 권고한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3~6년, 가중 5~10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소방대의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범죄에도 응급의료방해 범죄와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윤기 사건 개입’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입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부실 및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60)을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을 지낸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행했다.

이와 함께 장윤기 사건 초기 수사 당시 국수본 지휘라인에 있던 고위 간부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 경찰청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이는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이주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지시가 당시 국수본 지휘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이 과정에서 수사 방향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박 전 본부장은 분리수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장윤기 살인 사건의 송치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해당 사건을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신분 확인 없이 경찰 순환인사 설문 “왜곡 우려”

형사소송법 개정·장윤기 사건 계기...21일까지 시행 경찰직협 “시행 전제 설문...경찰관 일괄 처벌 안돼”

‘장윤기 사건’의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계기로 경찰청이 지역 연고에 따른 이른바 ‘향찰(鄉察)’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장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가 별도의 경찰관 신분 인증 없이 네이버 로그인만으로 진행돼 결과 왜곡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내부 게시판인 ‘폴넷’에 ‘경찰 순환인사

제 관련 현장 의견 수렴 계획 안내’를 게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순환인사제 확대 추진에 앞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체계 변화로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조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만큼, 조직 신뢰와 현장 경찰

관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순환인사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설문조사와 내부 게시판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등 3가지 방식으로 의견을 듣는다.

설문에서는 순환인사제의 긍정·부정적 측면과 개선 방안, 순환인사 외 경찰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인사제도 등을 묻는다. 응답자는 계급과 재직기간, 연령대, 성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횟수, 소속 기관 등을 선택하도록 했다.

문제는 응답자가 실제 경찰공무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중복 참여를 막기 위해 네이버 로그인을 거쳐도록 했으며 관리자가 참여자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계정이나 경찰관 신분을 확인하는 별도의 인증 절차는 없다.

실제 QR코드를 통해 설문에 접속하면 경찰공무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응답하고 제출할 수 있다.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경찰관이 아니더라도 계급과 재직기간, 근무 기능, 순환전보 경험, 소속 기관 등을 임의로 선택해 응답할 수 있는 구조다.

경찰청이 해당 설문을 순환인사제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인 만큼 실제 경찰관이 아닌 응답이 포함될 경우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순환인사제 확대 논의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과 맞닿아 있다. 사건을 둘러싸고 장기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며 형성된 경찰관들의 인적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이른바 ‘향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광주경찰청이 2007년 개청한 이후 19년간 광주청 소속으로만 근무한 경찰 이하 경찰관이 8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장윤기 사건의 수사 부실 및 유착 의혹 대책으로 경찰관의 연고지 장기근무에 따른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착 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의 타지역 전보와 원소속 지역 복귀 제한 등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직협은 “찬반을 명확하게 묻는 문항이 없어 설문 자체가 이상하다”며 “제도 시행을 전제로 현장 의견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설문조사와 내부 의견수렴, 현장 자문단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해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